

## 2025년 美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주희 연구원 (02-6000-5071, jh.han@kita.or.kr)

### I 2025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개요 및 구성

- 美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월 말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각국의 무역장벽을 지적
  - USTR이 매년 3월 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NTE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상품·서비스 교역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외국 정부의 무역, 기술장벽 및 통상 현안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 제시
    - USTR, 상무부, 농무부 및 기타 미국 정부 기관, 그리고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수집된 정보와 공고에 대한 응답을 통해 보충된 정보에 기반하여 작성
- 올해 보고서는 ‘미국 우선 통상정책’ 대통령 보고(4/1) 및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4/2) 직전 발표
  - 백악관은 지난 2월 ‘상호주의 무역과 관세’ 메모랜덤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비관세장벽·보조금·과도한 규제 등을 포함

#### (참고) ‘상호주의 무역과 관세’ 메모랜덤에 언급된 상호관세 부과근거

- ① 해당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
- ②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미국 기업에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세금
- ③ 비관세장벽, 보조금,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 ④ 환율 조작, 임금 억제, 중상주의적(mercantilist) 정책 등
- ⑤ USTR이 판단하는 기타 불공정한 무역 관행

## □ 무역장벽 유형은 전년도와 같이 14개 분야를 유지

○ 지난 해에 이어 ▲수입정책,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장벽, ▲디지털 무역, ▲투자규제, ▲보조금, ▲반경쟁적 관행, ▲국유기업, ▲노동, ▲환경, ▲기타 장벽의 총 14개 범주

- 지난 해(2024년) 보고서는 각 분야에 대한 별도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올해 보고서는 간략한 정의를 포함

- 2023년 보고서와 유사하나, 정부조달 부분에서 '국산 조달(Buy National)' 정책을 추가로 언급

## II 2025년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의 무역장벽 지적사항

□ 한국에 대한 지적사항은 작년과 유사한 가운데, ▲국방 절충교역, ▲플랫폼 규제 법안·산업기술보호법, ▲원전 외국인지분 금지 등을 추가

### □ (정부조달) '국방 절충교역' 지적

○ 한국 정부가 '국방 절충교역'(Defense Offset Program)<sup>1)</sup>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제품을 우선시한다고 지적

- 1천만 달러 이상 방산 계약 시 외국 계약업체에 절충교역(offset obligation)<sup>2)</sup>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

### □ (디지털 통상) 플랫폼 규제 법안·산업기술보호법 추가 및 데이터 현지화 재지적

○ (경쟁 정책)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sup>3)</sup>에 대한 우려 지적

-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 2개사<sup>4)</sup> 및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다수의 한국기업 및 타국 기업은 제외

-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의 규제(금지, 의무) 도입 우려

○ (데이터 현지화) 3년 만에 재지적된 사안으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3.9월 시행)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4.3월 시행)상 과징금 부과 기준 확대(한국 내 매출이 아닌 글로벌 매출 기준) 및 개인정보의 해외 전송 제한 언급

○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안보 관련 핵심기술(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에 대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불허

1) 국방 절충교역 제도는 방위사업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방위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1천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함을 규정

2)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방위사업법 제3조 6항)

3) 정부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24년 말 백지화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

(23.12월) 플랫폼법 신규 제정 추진 발표 → (24.2월) 플랫폼법 연기 발표 → (24.9월) 플랫폼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발표

4)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단, 연매출 4조 이하 플랫폼은 제외) 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으며, USTR이 제기한 국내 지배적 사업자 2개사는 네이버·카카오로 추정

□ (원전) 발전 분야 외인 지분 제한 외 원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금지를 지적

- 기존 보고서에서는 전력 생산과 관련하여 수력, 화력, 태양광 등 비원자력 전력 생산 부문의 외국인 지분 제한(30%)을 언급하였으나, 2025년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발전 부문을 추가 지적

<2025년 NTE 한국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무역기술장벽	<p>□ (화학물질) 한국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4개의 법률* 및 시행령과 관련 이행 지침 부족, 영업기밀 보호조치 미흡, 시험 대상 화학물질 선정 및 시험 방법론의 투명성 부족</p> <p>* 관련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p> <p>□ (포장 및 라벨링) 재활용법* 상 포장공간비율 계산 방식의 불명확성 및 재활용법 개정안의 라벨링 의무규정으로 인한 제품 출시 지연 우려</p> <p>* 관련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p>
위생·검역(SPS) 장벽	<p>□ (농업생명공학) 새로운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의 비효율성 지적</p> <p>- (추가) 유전자교정생물체(GEO)를 'LMO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2024년 개정안<sup>5)</sup> 언급</p> <p>* 농촌진흥청의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적합판정 관련사항('25.2월,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로트가 개발한 'SPS-Y9' 품종의 환경 위해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은 미포함</p> <p>□ (쇠고기)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및 일부 가공육 수입 금지</p> <p>□ (반추동물 유래 사료) 미국산 반추동물 성분이 함유된 애완동물 사료에 대한 시장 접근 부족</p> <p>- (추가) '25.1월 농림축산부의 개정고시* 발표 언급</p> <p>* '25.2월부터 반추동물 성분 포함된 사료의 수입 일부 허용</p> <p>□ (원에 작물) 오리건주 외의 다른 주에서 수출되는 미국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 자몽(텍사스산), 핵과류(캘리포니아산)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수입확대 요청이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동식물검역본부에서 대기 중임을 언급</p> <p>□ (잔류허용기준) PLS 도입 관련 우려 언급</p> <p>-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며, 별도의 수입 허용 기준(import tolerance)을 설정하도록 요구</p> <p>- '22.1월부터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의 최대잔류기준(MRL), 수입 허용기준, 또는 0.01ppm의 기본 기준 중 하나를 준수하도록 요구</p> <p>- (추가) '24.1.1.부터 수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설정한 MRL을 따르지 않고 마찬가지로 국내 기준만 인정한다고 언급</p> <p>- 한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달걀, 수산물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MRL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Codex MRL 및 유사 품목의 최소 MRL을 계속해서 인정</p>
정부조달	<p>□ (정보통신장비 암호화 기준)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완화됐으나 여전히 중앙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체 조달 네트워크 장비에 요구되는 암호화 기준으로 시장 접근 제한</p> <p>- 국가정보원의 자체적인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한 추가적인 보안 인증 요건 부과 지적</p> <p>- '22.10월, 국정원은 '3단계 인증 등급' 체계를 도입해 민감도가 낮은 등급에 속하는 기관은 추가적인 국내 보안 검증 없이 국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90% 이상의 공공기관에 SES 제도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추가)</b> '24.9월, 국정원은 국제 암호화 표준을 인정했으며, '25년 다중보안등급(Multi-level) 보안체제 도입 예정 계획 발표</li> <li>□ <b>(클라우드)</b> 공공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획득을 위해 별도 인프라 구축 필요, 데이터 현지화 요구, 한국 거주 인력 확보 등 인증 요건 언급</li> <li>- '22년 법 개정으로 기존 권고사항에서 법적 요건으로 격상 후 '23.1월 '3단계 인증 체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에 장벽 존재</li> <li>- <b>(추가)</b> '24.9월, 국정원은 중간 등급 CSAP 인증까지는 현지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요구 면제 계획 발표</li> <li>□ <b>(국방 절충교역)</b> 한국 정부의 국방 절충교역(Defense Offset Program)의 차별성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천만 달러 이상 방산 계약 시 외국 계약업체에 절충교역(offset obligation) 의무 부과 가능</li> </ul> </li> </ul>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조품 환적, 지리적 표시제, 지재권 보호를 위한 민·형사상 처벌 부족</li> </ul>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청각)</b> 현지 콘텐츠 쿼터제 등 전통 미디어에 적용되는 규제가 OTT 플랫폼에도 적용될 우려 제기</li> <li>□ <b>(보험)</b> 재보험 업무에 필요한 보험 가입자 정보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는 '22년과 '24년, 유권해석을 발표하며 '미국 재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위험 관리 및 인수 심사 목적으로 국외 이관할 수 있다'고 설명</li> <li>- 그러나 미국 재보험사들은 공식적인 문서화가 없어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li> </ul> </li> <li>□ <b>(법률시장)</b> 외국 로펌의 소유 지분(49%) 제한, 업무 범위 제한 등 합작 법인 형태를 통한 법률 시장 진입의 실질적인 한계</li> </ul>
디지털 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망사용료)</b> '21년부터 국내에서 발의된 망사용료법*과 관련, 해외 기업의 망사용료 지불은 차별일 뿐 아니라 반경쟁적 조치라고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li> <li>- 일부 한국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는 콘텐츠 제공업체로도 기능하기에 미국 기업의 망사용료 지불은 한국 기업에 그 자체로 혜택이라는 지적</li> <li>- 또한, 한국의 ISP 시장을 지배하는 3대 사업자의 독과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li> </ul> </li> <li>□ <b>(경쟁정책)</b> 거대 플랫폼 기업 규제방안에 대한 우려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대상에 한국 기업 2개사 및 미국 기업이 포함되는 한편, 다수의 한국 기업 및 타국 기업은 제외됨을 우려</li> </ul> </li> <li>□ <b>(위치기반 데이터)</b>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의 국외반출 제한으로 인해 해외 기업의 교통정보·네비게이션 등 글로벌 지도 서비스 경쟁력 약화</li> <li>□ <b>(데이터 현지화)</b>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4.3월 발효)은 과징금 부과 기준 확대(한국 내 매출이 아닌 글로벌 매출 기준) 및 개인정보의 해외 전송 제한</li> <li>□ <b>(산업기술보호법)</b> 국가안보 관련 핵심기술(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에 대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불허</li> </ul>
투자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49%), 비원자력 발전 분야 외국인 지분 제한(30%), 육류 도매업, 간행물 발간 등(50%)과 관련한 투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추가)</b> 원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li> </ul> </li> </ul>

기타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의 불명확성 및 수입 차량의 규정 위반에 대한 세관 당국의 형사 기소 규정</li> <li>□ (의약품/의료기기)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 가격 산정 및 급여 정책 및 혁신 의약품 기업 인증 제도 관련 불투명성</li> </ul>
-------	---

### III 시사점

□ 2025년 NTE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한 첫 공식 문서로서, 바이든 정부에서 발간된 보고서와 ▲보고서의 의미, ▲무역장벽 정의 재확대, ▲디지털 무역장벽 언급 확대 등에서 차별화

- (보고서의 의미) 2024년 보고서는 NTE 보고서의 의미 중 하나로 '근로자 이익 증진'을 명시하였으나, 2025년 보고서는 해당 부분을 생략하고, '무역법 집행 및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 증진'을 추가로 제시
  - '무역법 집행'의 경우 5년('19-'23)간 서문에서 유지되었으나 작년 보고서에서 수정된 부분으로, 올해 보고서에서는 이를 다시 추가
- (무역장벽 정의 재확대) 2025년 보고서는 무역장벽을 '정부의 법률, 규제, 정책 또는 관행(비시장 정책 및 관행 포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저해하는 요소'로 광범위하게 정의
  - 바이든 행정부(2024)는 무역장벽을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교환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정부 조치'로 축소 정의하며, 상대국의 조치가 '합법적인 공공 정책' 인지를 검증하겠다고 언급

	2024년		2025년
NTE 보고서의 의미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인식 제고 장벽의 완화를 위한 무역협상 촉진 근로자 이익 증진에 기여	→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인식 제고 장벽의 완화를 위한 무역협상 촉진 무역법 집행 및 미국의 경제·안보 이익 증진에 기여
무역장벽의 정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 간 교환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정부 조치	→	정부의 법률, 규제, 정책 또는 관행(비시장 정책 및 관행 포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거나 저해하는 요소

- (디지털 무역장벽 언급 확대)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 전년도 보고서에서 제외되었던 디지털 무역장벽을 다시 지적
-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하고 '불공정 무역'에 대한 시정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상호관세 발표(4/2)를 앞두고 NTE가 발표되었으나, 동 보고서는 1974년 무역법 181조에 근거하여 매해 3월 말 발간되는 연례 보고서
-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향후 상호관세 조치 및 후속협상에 모두 연계될 것으로 보기 보다, 미국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하고 참고하는데 사용할 필요